

제337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1월23일(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 1.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논의

심사된 안건

- 1.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논의 1

(15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현대정치사의 큰 별이셨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조문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마지막 영결식장이 국회로 정해진 만큼 오늘 첫 회의를 여는 지금 우리 모두 김영삼 대통령의 영면을 추모하는 묵념을 가볍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기선 위원님의 간단한 보임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 지방의 정치적 주권이 훼손당하지 않고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데 정성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특위가 논의 중인 국회 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논의

(15시12분)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향후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및 회의 진행 방향 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조속히 선거구획정기준 제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발언 순서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질의 순서를 배부 안 했어요. 손 드시는 분 하면 돼요.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저한테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를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달 15일이면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전까지는 여야 간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농어촌 대표성을 얘기하면서도 저희 당이 또 시민사회가, 학계가 상당히 무게 있게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라는 게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그른, 영어로 얘기하면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의 그런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야 간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쪽이 또 양보하고, 한쪽이 얻는 게 있으면 다른 쪽이 얻는 것이 있는 그러한 게임 룰의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얘기하면서 의원정수에 대해서 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것은 마치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는 듯하나 모두가 상관관계가 있는, 그래서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 주장도 결국은 허언에 불과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저희 당은 당장 20대 국회에 이것이 도입되기 어렵다면 21대에라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비교적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20대 국회의 권리를 운운합니다. 구성되지 않은 20대 국회의 권리를 얘기하기 전에 19대 국회 정개특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되지 않은 국회의 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구성된 19대 국회의 정개특위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그 의지를 가지고 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조정안도 저희 당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님의 제안조차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이것은 저희 정개특위의 본질

과 가치를 저는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증가성의 문제가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종전 3 대 1 기준에서 2 대 1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요약하면 표의 증가성의 문제입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표의 증가성의 왜곡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례대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단순한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하자, 마지막 결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대에 도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21대에는 도입해 보자라는 여야 간의 총론적 합의가 있으면 저는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의 문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문제, 미세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정말 국민들을 앞에 두고서 정치적 대결단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박범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민식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박민식 위원 박민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정개특위가 열려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불멸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지요. 정말 그 엄혹한 시대에 유독 빛나는 큰 별이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장 상중입니다. 상중인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겠습니까마는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였고 정말 투쟁할 때 투쟁하지만 또 타협할 때 타협했다…… 그런 유지를 우리 후배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히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개특위는 그야말로 정치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특별위원회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간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 달 두 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만든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질곡된 의혹의 정개특위 역사를 이번만큼은 좀 바꿔 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하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실정은 그야말로 또 다른 의혹의 재판이었다 이런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중이라는 또 고 김영삼 대통령의 타협과 관용의 정신을 되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한 발 물러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청할 부분도 많고 저도 스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두 가지 점을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지금 물리적인 시간도 있습니다마는 정개특위와 선거제도의 문제는 물론 긴밀하게 관련이 있지만 우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지지한다고 하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제도를 얼마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하는지는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내 손으로 뽑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도는 많은 비례대표 출신의 의원님들이 훌륭하시지만 그 선임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뽑는 제도가 아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과거에 권력자들의 전리품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고 현재도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지요. 학자들은 물론 주장할지 모릅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행 선거법이나 우리 헌법 규정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선거법 프로세스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숫자 200인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 200인에서 300인 사이에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하면 선거구가 정해지는데 그 숫자가 지역구 숫자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숫자는 뭐냐 하면 의원 총수,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의원 총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지역구 숫자를 빼면 저절로 나오는 보충적인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줄이지 못한다 또 늘려야 된다고 하면 그

프로세스를 상당히 오해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사님들이 한번 접근을 다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석 예.

○백재현 위원 저희들 오늘 전체회의를 하는 것은 지난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은 처리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 이것만 되어 있는 안건이네요.

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논의 이거 대단히 시급하고 해야 될 일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것처럼 정치적으로 침체하게 해야 될 일에 여야 간사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부쳐 봐야 별 의미도 없고, 특히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고 김영삼 대통령 국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가장 참여한 정치개혁특위가 정쟁이 될 수 있는 이 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던 것인데, 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 안건은 양당 간사간에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특히 여야 대표께서 국상기간 내내 정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이 정개특위에서 이런 논의를 깊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이 정도에서 매듭을 짓고 여야 간 깊은 논의를 한 후에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정개특위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또 다른 위원님?

김기식 위원님!

○김기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입니다.

저는 먼저 참 유감스러운 게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 2004년도 박관용 국회의장님 시절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으로서 우리 정치사에 획기적인 2004년도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도 결국 벽을 넘지 못했던 중요한 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마다 선거 직전에 가서야 이루어지고, 특히 게리맨더링

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개특위를 하면서 크게 보람으로 느꼈던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그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국회는 가부만 결정하는,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획기적인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시민 운동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래도 정치를 하나라도 개혁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지금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가 처리했던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시켰던 개정의 취지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그 가부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10월 13일까지 하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없는 시간에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새누리당 추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기존 합의들을 무산시키면서 243 플러스 3의 여유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놓고 일방적으로 여당 지역구에 배정해야 된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합의를 다 무산시켰습니다.

오늘도 선거구 획정 관련 정개특위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선관위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 선거구 획정 못 합니까? 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윤석근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것은 정개특위가 무슨 법률을 처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또다시 독립시켜 놓고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의 선거구획정위원들이 가합의했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하도록 두기만 해도 저는 선거구 획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전 세계 정치 선진국 중에서 의회제도에서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 정도지요.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원이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도농 간의 지역 편차가 있고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지역 대표성과 인구 증가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을까? 동시에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 다시 말해서 표의 대표성을 최대한으로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 선진국의 현실인 것이지요.

그 비례대표제도를 대한민국에서 과거 돈 전(錢)자 전국구라는 형태로 운영한 것은 독재정권 이래로 소위 정치권력이 의회권력을 통범부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우리가 청산해야 될 나쁜 정치관행이었고 그런 나쁜 정치관행과 정치풍토를 개혁하는 데 돌아가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기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04년도에 이어서 10년 만에 이루어 낸 이 획기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킨 이 정치개혁을 완성시켜야 하고요.

동시에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실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 분포가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에 있어서 비례대표 문제를 오히려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지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역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시도별, 주별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제가 무엇보다 정말 정부 여당에게 이 와중에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당 소속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낸 중재안을 야당이 통 크게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당 소속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것을 일언지하에 여당에서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집권 여당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성은 뭐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침예하게 걸려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킨 이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더 큰 책임은 다수당, 과반수를 넘기고 있는 다수당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로지 현역 영남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결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이면 지금의 선거구가 모조리 다 백지화되어 버리

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그저 야당보고 양보하라고 하면서 여당 정치개혁위원장도 제기한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여당이, 저도 의회 감시를 하면서 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20년째 일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여당을 처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병석 위원장께서 내신 중재안이라도 여당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선거구 확정 문제와 정치관계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기식 위원께서 좋은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김기선 위원이 먼저 손들었나요? 먼저 하세요.

○김기선 위원 정치개혁특위에 새로 보임되어와 가지고 첫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5개월도 안 남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선거구 확정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여야 간의 대표까지 나서면서 며칠에 걸쳐 가지고 이런 관련된 협의를 하고 또 회담을 해도 이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지금 비례대표와 같은 수십년 동안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선거제도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손질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여야 간에 얼마든지 말을 하고 협상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구 선거구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원칙이 정개특위에서 국회가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씨름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다, 지금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과 관련된 이 법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고 계셨다.

지금 현행 지역구 확정 관련된 선거법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여기는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선거구 확정 새로 조정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군을 갖다 붙여 줘야 됩니다. 5개 이상의 시·군에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붙을 보듯 뻔하게 됩니다. 이거 여야 정개특위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국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정상적인 선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

다.

이번에 헌재에서 2 대 1 인구편차 넘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이나 관계법에 보면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것 등등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선거구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끔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단원제입니다. 대부분이 양원제를 하면서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선진국가의 예입니다.

우리가 단원제인 이런 상태에서 인구 대표성은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고 관계법의 정신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5개 시·군이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가 되면 어떤 국민들이 이걸 정상적인 지역구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1개의 선거구가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서울 중랑구 선거구의 700배가 넘는 그러한 괴물 선거구가 붙을 보듯 뻔하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확정과 관련해서는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그야말로 농어촌과 지방이 소외되고 정치적인 주권이 늘 피해 보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국회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의 지역구 확정기준이 맞느냐? 여나 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괴물 선거구가 탄생하는 것이 붙을 보듯 뻔하게 돼 있는데 이것 그냥 내버려두고 가실 겁니까? 큰 덩어리와 관련해 가지고 협상할 건 협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많은 지방의, 농어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이상의 시·군이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등장할 때 우리 19대 국회, 국민들한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개특위가 다른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헌법정신이고 관계법의 규정이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 기준은 정하고 가야 된다. 이것까지 몽땅 몽땅그려 가지고 여야 협상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대단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러한 지역구 확정기준이라도 정개특위가 반

드시 국민의 기대에 맞게끔, 헌법과 관계법 정신에 맞게끔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발언권 드릴 테니까, 잠시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완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라는 전제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중재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중재안에 관계된 안은 제가 어느 특정 정당에 속해 있다는 전제로 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준 대한민국 국회의 충의를 담아서 객관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뜻을 담아서 제 나름대로 중재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제 중재안의 기본원칙은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표의 등가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러면서도 이제는 사표 방지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제가 이 교착상태를 타개하는데 한 실마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중재안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객관적 기구인, 오늘 윤석근 선거실장이 선관위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 중재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윤석근** 위원장님 중재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객관적인 의견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선거정책실장으로서 여기에 나오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또 조직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의견과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하셨던 주요 쟁점들, 대부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녹여 낸, 얼버무려서 가장 잘 녹여 낸, 고민하신 그런 의미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되어 있으셨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전국구 제도를 취하면서 일부 연동제를 가미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자하신 그런 의견들은 저희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제가 마무리 발언 때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이학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학재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님께서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잘 못 풀리고 있는 것에 대한 여당 측의 책임론 같은 것을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발언을, 간사가 사실은 발언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기준을 잘 마련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특히나 새누리당이 개입해 갖고 잘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자체를 국회에서 정해서 획정위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선거구 획정기준을 가지고 획정위에서는 획정하게, 이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획정위를 둔 것은 정치권의 입맛대로 획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지 획정기준까지 다 거기에서 마련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획정위에서 획정기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획정위에서 획정을……

(장윤석 의원, 위원장에게 성명서 제출)

잠깐만, 제가 발언 중이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이병석** 회의가 중단이 되니까 조금만 이따……

○**이학재 위원** 장윤석 의원님, 발언 중이어서요.

○**위원장 이병석** 발언 계속하십시오.

○**이학재 위원** 정치권에서 획정기준을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획정위에서 획정기준까지 한번 마련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때 안 된 것은 획정위에서도 지금 획정기준을 246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못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새누리당의 추천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었고 다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됐을 텐데 거기에서 합의하지 못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획정위의 독립성이라든지 또 획정위 구성원들의 인격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15일 날 예비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이 예비후보 등록에 큰 차질이 없게 하려면 저는 12월 2일 날, 늦어도 예산 국회 때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역으로 계산하면 꼭 오늘이 아니라도 한 11월 25일경, 한 2~3일 내로는 확정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되려면 11월 25일, 한 2~3일 내로는 확정을 해야 되는 지금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인구의 편차를 3 대 1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2 대 1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확정기준을 잡고 확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제1야당에서 많이 주장하시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우리처럼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고 소선거이고 또 정치적인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저는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권의,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논의라고 하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은 국회의원 인구편차가 3대1일 때나 2 대 1일 때나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 대 1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조정하라고 하는 이 마당에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를 들고 나와서 그것이 안 되면 이게 전체가 조정이 안 되는 것처럼 조건화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향후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거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에 논의할 수도 있고 또 19대 국회에서도 지금 선거구 획정과 달리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거구 획정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안 되면 선거구 획정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시는 그런 순수

성도 해칠 수가 있고 또 자칫 여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 주장하시게 되면 선거구 획정에 이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례대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박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인구의 기준이라든지 기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정해 갖고 그것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결과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그냥 결정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야당에서 계속 비례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비례대표를 아주 극단적으로는 단 한 석도 못 줄인다든지 또는 비례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석도 못 줄인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줄이더라도,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시간도 많지 않은데 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박범계 위원님께서 정수를 늘리자는 안을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지금 정치권이……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학재 위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스스로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번 국회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현행 54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246석을 가자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던 최소한으로 비례대표를 줄이면서도 농촌 지역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타협을 찾을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서 지금 불과 2~3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정치적인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식 위원** 사실관계 때문에……

○**위원장 이병석** 잠깐만요.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인 저한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외 세 분과 새누리당의 장윤석 의원 외 세 분, 여덟 분

의 이름으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성명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언하실 때……

○김기식 위원 일단 사실관계 때문에 얘기를 먼저 하고요.

○위원장 이병석 가만있어 봐요.

발언하실 때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를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희 위원 이미 배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다 배포했습니까?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이것은 별도의 자료입니다.)

○김기식 위원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아 니에요. 별도예요, 별도.)

○위원장 이병석 별도로 나온 걸 지금 빨리 배부해 주세요. 배부해 주시고……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발언은 저희들이 허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인 저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곡한 의견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접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그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개특위 위원들의 결정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알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방금 배포한 그 자료와 미리 배포했던 자료를 정개특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삼아 주셨으면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이 자료를 속기록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장님께 올립니다.)

그건 여야 간사 간 또 협의를 거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의견 전달을 해 주신 걸로 하고 또 위원들이 충분히 그 의견을 들었다, 경청했다 하는 전제로 우리 네 분의 의원님이 이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겠

습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꼭 정개특위 속기록에 반영되는 어떤 절차나 형식을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하고 의논해서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그러면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농어촌 지역 의원들 또 농어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특별히 농어촌 특별선거구에 관한 정개특위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예, 장윤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張倫碩 議員 여상규 위원석 뒤에서 — 저희들 물러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발언은 김기식 위원보다……

○김상훈 위원 아직까지 발언하실 분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발언하시고……

○위원장 이병석 아까 발언하신 분은 나중에, 좀 기다리세요.

○김기식 위원 사실관계 때문에 제가 먼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병석 좀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또 발언하실 위원님은……

누가 하실래요? 김상훈 위원님이십니까?

○김상훈 위원 여상규 위원님이……

○위원장 이병석 아, 여상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상규 위원 저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확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의논을 하고……

○위원장 이병석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하세요.

○여상규 위원 예, 이게 방향이 좀 그래 가지고……

선거구 확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요,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왜 여당에서 받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위원장 이병석 여상규 위원님!

○여상규 위원 예.

○위원장 이병석 발언 중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피력한 의견, 4+4 협상 과정에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 자체는 한때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런데 왜, 오늘 그 말이 나오니까……

○위원장 이병석 그런데 경과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낸 중재안 가운데서 균형의식을 전제로 한 전국 비례대표제에 대한 수용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하실 때 그 부분을 다소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십시오. 물어보시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죽어도 고집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예, 양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보면 우리 박범계 위원님이나 김기식 위원님 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제시한 안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그것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궁극적으로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과도기적으로 그런 안이 주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자는 것이지요. 자당에 유리하다 해서 어떤 제도를 내놓으면 그것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타당에서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것부터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절대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미리, 나중에 21대부터 시

행하는 걸로 미리 입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절대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 국가마다 처한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라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채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장 지금 논의하기에는, 논의해서 채택하기에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우리가 빨리 마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하에서요, 약간의 사표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소선거구제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중선거구제나 대선선거구제로. 그리고 또 현재가 3 대 1 인구편차 기준을 2 대 1로 줄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어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투표의 등가성 이런 면에서 진일보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 대 1 편차일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미 투표의 등가성이 상당히 보완된 이런 2 대 1 편차 기준이 발표되고 난 뒤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농어촌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고 또 농어촌 선거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이번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걸 저는 농어촌 특별선거구제…… 이게 지금 현재 판결 자체가 절대적으로, 완전히 어떤 과학적인 기준처럼 2 대 1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상하 양원제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이것을 무조건 2 대 1을 수학적으로 그냥 지키라,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어촌 특별선거구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우리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보낼 때 이런 취지도 살려서 어느 정도, 또 국민 여론도 감안하고 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어느 정도 줄이고 지역구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이 가장 국민의 생각과 일치되는 그런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조금 장기 과제로 우리가 논의해 가고 그리고 선거구 획정기준을 빨리 마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위원이 먼저 발언 신청을 했어요.

김태년 위원이 먼저 하세요. 왜냐, 이학재 간사가 하셨으니까 먼저 들었고.

○김태년 위원 여당 간사께서 발언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법적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 또 이 법적 시한은 우리 19대 국회 마지막 정개특위에서 만든 거였는데요, 지키지 못해서 정개특위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법적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지난, 오래전에 여야 간사 간에 혹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서 최대한 현행법에 근거해서, 현행법을 기준해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획정위원회로 보내고, 그 나머지 과제,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그 나머지 과제는 계속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수용하지 않은 데가 지금 왜 이 획정기준 빨리 정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당입니다, 여당. 여당에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 선거구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야의 대표들까지 포함된 4+4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여야 대표가 포함된 사실상 책임급에서 이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결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농어촌 의원님들도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현재 판결에 의한 2 대 1 인구편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농

어촌 축소는 어쨌든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충족하고, 또 비례대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라고 하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가뜰이나 부족한 비례대표를 계속 축소해 가 버리면 사실 이 비례대표제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4 협상에서도 여당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개혁의 성의라도 보여준다면, 개혁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준다면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내년 총선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우선 법제화를 하되 21대부터 도입하자라고 하는 수정 제안도 해 봤고요. 또 과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를 받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21대도 받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야당이 더 양보해서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균형의식 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관위도 아까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병석 위원장님께서도 이 제안을 하실 때 잘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균형의식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지금 거대 정당인, 제1, 제2당인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에는 많아야 3석, 그렇지 않으면 1석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 보면 1, 2석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례대표 의석수 변화만 놓고 보면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지역구 늘어나는 것, 지역구 의석수 늘어나는 것을 양당이 가져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의석수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하지는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여당에서 염려하는 과반이 무너지고 할 그런 이유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받겠다고 해서 여당 대표께서—김무성 대표가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한다면 이 균형의식 중재안을 받겠다. 수용하겠다’고 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에서 또 거부

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 어떻게든 합리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합의에 근접해 가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는 쪽은 지금 여당 아닙니까? 이 점을 좀 분명히 하면서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딱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이번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사실관계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그런데 두 분 위원님들끼리 맞대응하면 정쟁이 돼요.

○**김기식 위원** 맞대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병석** 오늘 발언 한 번 하신 분은 자체해 주시고 또……

그래, 정의당, 발언하세요.

○**정진후 위원**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언론을 유심히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폈을 때 평상시에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의원님들께서 선거구 확정 논의만 있었다 하면 마치 정말 전사처럼, 앞뒤 가리지 않는 병사처럼 카메라 앞에서도 몸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정개특위에 참여하면서 논의하는 내용과 과정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이 비례의석 축소 단 한 석도 안 됩니다. 비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단순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국민의 여론을 국회로 수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특위가 무엇인가 논의를 진전시켜야 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균형의석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시 지금

‘비례대표를 무조건 축소해야 된다. 비례대표는 권력자의 전리품이다’, 이게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형태들을 개선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 정개특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시기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인정했으면 그와는 좀 더 진전된 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균형의석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이 특위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합의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안은 어떤 당의, 일당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과반 의석을 점유할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고 논의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국회 안에서 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야말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낳고 여론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해 있다, 골몰해 있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다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 조금 썩이라도 해소해 가자는 것이 정개특위의 목표이고 국민들에게 정개특위가 결과물로 제시해야 될 내용인데 여전히 정개특위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당의 과반 의석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아니, 세상 천지에 어느 당은 제1당이 되는 제도를 가져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정회를 통해서 과반 의석을 채워 주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해 왔던 논의를 무로 돌리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 주시고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으로 해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안을 던지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치적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안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특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

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정 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김상희……

○**김상희 위원** 김기식 위원이 꼭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좀 하시도록 하는 게……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이쪽을 양보하시렵니까, 다음에 하실 겁니까?

○**김상희 위원** 다음에 할게요, 먼저 양보하고.

○**위원장 이병석** 우리 김기식 위원님께서 너무 억울한 모양인데, 원칙……

그다음에 이쪽에 또 누가 있습니까?

○**김상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발언하지 못한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병석**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공직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한 여러 이야기들 또 발언하신 내용들이 바로 곧이어 열리게 될 공직소위에서 아마 구체적인 사안을 다룰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전체위원회 회의를 지속하는 것은 공직소위의 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 드리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김기식 위원님께서 아까 이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김태년 위원** 사실관계만……

○**위원장 이병석** 사실관계만 서로 확인하는데, 꼭 하겠다니까 듣고, 김상훈 위원까지만 얘기를 듣고 일단 끝냅니다.

○**김태년 위원** 김기식 위원이 사실관계만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병석** 김상훈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기식 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첫 번째로 정개특위가, 선거구 확정기준은 선거법이 다루는 게 맞지요. 그리고 선거구 확정안은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하는데, 선거구 확정기준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 현재 선거법상 선거구 확정기준이 있는 거고요.

지금 선거구 확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 상한선하고 자치구 분할 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상한선은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치구 분할 문제

는 케리맨더링 문제 때문에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 왔던 사안이고, 예외적으로 부칙에다 허용해줬던 부분들을 이번에 고치는 거기 때문에 선거구 확정기준을 이 정개특위가 지금 와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선거구 확정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선거구 확정기준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선거구 확정 전제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왜 갑자기 2 대 1 되니까 얘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포함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이야기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이게 이번에 더욱 강하게 제기된 것은 2 대 1 편차로 줄이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조건에서 농어촌지역이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해 줄 수 있는가, 위헌이 아니면서도? 그것이 서구에서 똑같은 결론입니다.

비례대표를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을 통해서만 소위 인구 증가성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이 아니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강한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농어촌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검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제도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도 그런 점들에 이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정치시스템상, 정치제도상 나왔는지를 고려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사실은 발언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네 분 하셨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네 분이 발언을 하신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김상훈 위원** 예.

○**위원장 이병석** 김상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꼭 하시겠냐고 물으니까 상당히 부담되네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병석** 그리고 김상희 위원님, 두 분만 하시는 것으로……

○김상훈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의 상중이라서 가능하면 좀 갈등요인을 유발하지 않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출범시켜 놓고 현재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간사 간 또는 공직선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논의가 지연되어 왔던 이 결과 자체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정개특위 앞으로의 행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의 공멸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총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행히 아마 여야 간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2월 15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본회의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서로 다른 일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하는 노력은 조금 접어놓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야의 공통적인 변수를 제가 살펴보면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2 대 1로 표의 증가성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놓여준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이 과다하게 침해되는 것은 가능하면 한번 줄여 보자는 논의가 여야 간에 꾸준히 나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놓여준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셨지만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에서 선행 결정변수로 지역구

의석을 정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금과옥조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이 거둬지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보다 더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님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공히 극소수의 비례대표 의원님을 제외하고 각기 다음 총선의 지역구를 찾아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비례대표 의원이 어쨌든 당 지도부의 자기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짧은 일정상에도 불구하고 놓여준 지역구 등 지역 대표성이 심히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의 보전이라든지 보호 측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는 비례대표의 최소한의 감축이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례대표의 가치를,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감축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 특히 영호남 의석 등등 다른 지역도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융통성 있는 협의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소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논의하는 자체는 저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다만 여야 간사님들 간에 논의해 왔던 그 과정같이 지금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서로 쌍방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20대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게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20대 국회의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는 20대 총선에서 논의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현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아마 오늘 여러 가지로 쌍방 간에 좀 해결하지 못할 어떤 그런 논의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사전 회의를 통해서 이학재 간사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야당하고 성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몇몇 접점을 찾아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그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가능하면 12월 본회의에서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본회의 상정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 죄송합니다.

간사로서 이것은……

김상훈 위원님 말씀 참 유감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발언의 시작은, 말씀의 시작은 서로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안은 좀 쳐쳐 놓고 그리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안, 야당이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양보하고 결론을 도출하자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결론도 그렇게 내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신정훈 위원**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병석** 마무리를 좀 합시다. 왜냐하면 끝이어서 공직소위에서 본격적인 간사 간 또 위원들 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신정훈 위원** 나온 이야기를 잘 정리하면 여기서 다 결론이……

○**위원장 이병석**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김상훈 위원이 발언을 하셨고요. 김상희 위원님까지는 제가 발언권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신정훈 위원 말씀하시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석** 아이고, 그러면 또……

○**김상희 위원** 정말 너무 자괴감이 들고 유감입니다. 정개특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모두 다 기대를 하면서 특위에 임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현재의 판결, 2 대 1 인구비율을 맞추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주권을 찾아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2 대 1의 비율을 맞춰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의 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정치의 극복 그리고 전혀 소수당이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1000만 표가 넘게 사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과 또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정 정도는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몽땅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비율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 그리고 소수 세력의 정치계 진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2 대 1의 인구비율을 맞췄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특정 지역—농촌지역, 산간지역, 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다수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제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정당들이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재안으로 나온 위원장님 안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중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로 대립할 때는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위원장의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수당의, 그야말로 거부로 계속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다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사실 위낙에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오늘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처리를 못 한 겁니다. 그 법안 처리도 여당에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처리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도 더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도 오늘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법안조차도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개특위를 식물 정개특위로 만드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정개특위 위원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개특위에 임했던,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결국은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개특위 위원들만이라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앞당기는, 한 발짝이라도 가는 안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일부 축소하는 안을 우리 야당이 받았다고, 협상 과정에서…… 그것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이 자체는 사실 굉장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지금 정개특위가 민주주의를 한 발짝 가지는 못할 망정 후퇴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는 정개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지역구 문제 이런 부분에 함몰돼서는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처음에 임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이왕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위원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맨 처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기대가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대통령제하고 서로 상치되는 제도로 해 가지고 비토(veto)했던 여당 때문에 이 문제가 포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선거법 논의에서 인구 2분의 1, 2 대 1 편차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이 원래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례대표의 감소를 통해서 지켜 내겠다 하는 그

런 의견보다는 저는 원래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지만 의석수의 증대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안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국민 정서에 맞춰 가지고 비례대표의 숫자하고 연동되는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와 농어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봤을 때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필요하고 비례대표도 필요하지만 현재 감소되는 농어촌지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있고 직능도 있고 계층도 있고 정치적 소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완전히 줄여 가지고 농어촌 지역을 다 살리자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스럽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지역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감소도 최소화하는 안들을 제시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여전히 기존의 비례대표 숫자에 의존해서 자기 정치적인 권리 내지는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정당도 있었고.

이런 이해관계가 여기서 다 같이, 3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대단히 현명하시게도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균형의석제도라는 아주 기발한 안을 냈어요. 균형의석제도라는 것을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같이 하면 아마 더 좋겠지만 야당에서 기존의 주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양보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균형의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은 비례대표에 대한 배분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배분 방식?

배분 방식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농어촌도 무조건 지키겠다 또 비례도 무조건 지키겠다 이것 선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선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타협안, 비례대표 감축으로 손해 보는 정치적 소수파들의 이익을 존중해 주는 범위 그런 차원에서 균형의석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그것도 2분의 1 균형의석이란 말이에요. 2분의 1이, 50%가 부당하다고 그러면 49%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정의당 쪽에서도 50% 정도까지 양보하면 대단히 큰 양보라고 봐야지요. 거기서 간사

님 말씀대로 보면 1석이나 2석, 3석, 도대체……
이학재 간사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 새누리당에서 이 균형의식제도가, 균형의식제도 결국 전국구 방식의 비례대표제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에 7석 가까이 줄어든 것도 우리 당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배분하는 방식인데 우리 당의 이익이 납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더 열심히 하면 새누리당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학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에 가서 논의하시지요.

○신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답을 하라고 하시지 말고, 아까 맨 처음에 간사님이 우리한테 답을 하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새누리당이 통 크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양비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병석 위원장님이 내놓으신 균형의식,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야당이 받아들였고 또 정의당이 받아들였고, 그러기 때문에 새누리당 문제가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 크게 좀 양보하셔서 더 이상 2~3일 늘리지 말고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이상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고견들은 곧 이어서 열리게 될 공직법안소위에서 다루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협상은 일부 접점을 보인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교착상태라는 표현을 거두어들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소위에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더 좋은 안이 있을 때 그 안을 중심으로 양당 간사님과 소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협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것조차도 교착상태에 빠져서 진전이 되지 않을 때 제가 내놓은 중재안도 여러 의견 가운데서 한 안으로 충분히 깊게 다뤄 보는 여유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모든 토론을 마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경대수	김기선	김기식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회선	박대동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백재현	신정훈	여상규
유인태	이병석	이학재	정진후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장윤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윤석근
---------------------	-----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민현주	김기선	새누리당	2015. 10. 15